

“국민의힘, 공공의대 예산삭감 철회하라”

도의회 환복위, 국회 보건복지위 예산 심의 과정서 편성 불발에

“지난달 29일 당 차원에서 협조하겠다는 약속 지켜야” 거듭 촉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공공의대 예산 편성이 불발된 것과 관련,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연)가 18일 “국민의힘은 공공의대 예산삭감을 철회하고 전북도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환복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힘의 걸 다르고 속다른 거짓말에 국민들과 전북도민들은 분노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19 상황을 통해 우수한 역학조사관과 감염병 전문의사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며 “또한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서는 필수분야 전문의가 부족해 지역주민이 다른 지역으로 전원되어 진료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목격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가 나서서 설립하고자 하는 국립보건전문대학원(이하 ‘국립의전원’)은 시급한 공공의료인력 양

성은 물론 내과·외과·소아과·응급 의학과·산부인과 등 필수 전문과목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추진됐다”며 “국립의전원은 폐교한 서남대학교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별도의 의대 증원 없이도 설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공공보건전문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공공의료 양성의 시급성과 남원지역의 적합성을 고려한 것”이라며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0월 29일 국민의힘 전북동행 소속 11명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전북을 방문해 ‘남원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 의료계의 반대가 있었지만, 계획안이 다시 나오면 국민의힘 차원에서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환복위는 “국민의힘은 더 이상 발목 잡는 정당이 아니라 친호남·친전북 정당이 되겠으며, 전북 발전을 위

한 일이라면 과감하게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신규예산도 아닌 기존에 상정된 2억 3,000만원에 대한 삭감 주장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전북동행 의원들의 약속과 정면으로 배치되며, 도민의 기대를 저버린 걸 다르고 속다른 거짓이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상황을 타개할 의료인력 충원과 지역 간 의료불평등 해소, 기피진료과목 의료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10월 29일 ‘국민의힘 차원에서 적극 협조하겠다’는 국민과 도민에게 밝힌 약속을 지키고 공공의대 예산 삭감 주장을 즉시 철회하고 전북도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라”를 거듭 촉구했다. /유호상 기자

“지방의원 전문성 향상 ‘의정연수센터’ 건립을”

전주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조영훈 회장)는 지방의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방의원연수센터 설립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지난 17일 부산에서 열린 제229차 시도대표회의에서, 전북 대표회장으로 나선 전주시의회 강동화 의장은 “지방 행정사무 증가에 따라 우리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지방의원의 전문적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전담연수기관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정활동의 영역과 범위가 날로 증가하는 현실에서 국회, 중앙 및 지방공무원들에 비해 지방의원과의 의정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연수 환경은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하다”며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이 될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부설 지방의원연수센터 설립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지방의원연수센터 설립은 지방자치 인재개발



전주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부산에서 열린 제229차 시도대표회의에서 지방의원연수센터 설립 촉구 건의문을 채택한 가운데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전주시군자치구의회의장들 촉구 건의문 채택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 연수훈련 가능”

강동화 전주시의장 “의회 위상 강화 위해 매우 중요”

원이 가진 우수한 인프라를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지방의원과의 의정차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 연수훈련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 건의안을 발의한 전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 강동화 회장은 “지방의원연수기관 설립은 시대적 요구이자 우리 지방의회의 역할과 위상 강화를 위한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상용차 부품기업 역량 강화 총력을”

도의회 농산경위, 현장 점검



전북도의회 농산경위(위원장 김철수)는 18일 제377회 2차 정례회 기간 도출연기관인 자동차융합기술원(군산)과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익산)을 방문했다.

먼저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는 업무추진상황을 청취하고, 도내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에 대한 기술 개발 지원 및 애로 기술 해결 방안 등에 논의했다.

김철수 위원장(정읍)은 “전북도 자동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용차 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이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선제적 시장 확보를 위한 상용차 핵심 기술 개발을 통해 도내 상용차 부품기업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했다.

최훈열 의원(부안)은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 협약 이후 명진과 에디스

모터스 등 군산형 일자리 참여기업들이 전기차 클러스터 구축의 토대가 마련되고 있다”며 “자동차융합기술원 구축으로 전기차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 전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도내 대표산업으로 식품산업이 자리매김할 방안을 논의했다.

나인근 의원(김제)은 “전북의 다양한 식품가공 인력이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고용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두세훈 의원(완주)은 “도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공급할 수 있는 원료 중계 공급 시스템 구축 및 지역 농식품 산업 R&D 및 상품화지원 등 다양한 상생 협력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김철수 위원장은 “도내 자동차산업 활성화와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김영명 의심되면 ‘1339’로

이용호 의원 “신용대출 규제 완화 등 보완책 마련 서둘러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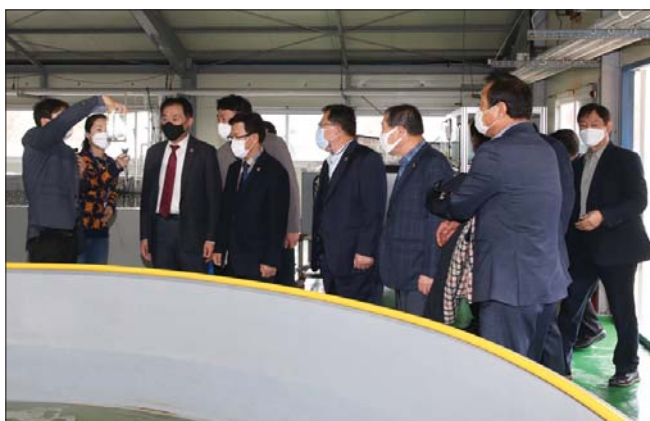
국회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18일 “정부가 1억원 이상 신용대출 받아 규제지역 내 주택을 사면 해당 대출금은 전부 회수하고, 9억원 초과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담보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신용대출까지 확대했다”면서 “위험 소지 논란이 있는 규제로, 이제는 내 집 마련 ‘영끌’ 조차도 할 수 없는 나라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 의원은 “현행 헌법 제23조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제한은 법률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정부의 신용대출규제가 집값 안정이라는 공공필요에 의한 제한인지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은 “이번 규제가 법률 형태가 아닌 ‘행정지도’여서, 직접적인 법률 근거가 미흡하고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약이 아닐까는 비판부터 받고 있다”며 “정부는 과도한 신용대출 규제에서 무주택자는 제외하고, 실수요자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규제 완화하는 등의 보완책 마련에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친환경 내수면 갑각류 연구시설 건립, 양식업 성장 발판돼야”

도의회 환복위, 현장의정활동 도 민물고기 연구센터 찾아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18일 완주군 고산면에 소재한 ‘전북도 민물고기 연구센터’를 방문해 현안 보고를 청취했다.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연)는 18일 완주군 고산면에 소재한 ‘전북도 민물고기 연구센터’를 방문해 현안 보고를 청취하고, 관계자를 격려하는 등 현지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날 환경복지위원들은 전북도 민물고기 연구센터 운영 및 주요 현안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주요시설을 점검한 후, 어족 자원의 유지와 보급 및 멸종위기 어종 생태계 복원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센터 내 내부 시설을 둘러본 뒤, 현재 추진 중인 친환경 내수면 갑각류 연구시설 건립이 고부가가치인 신식품 양식시험연구와 기술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전북도 수산양식업 성장의 발판이 되기를 당부했다.

이날 이명연 위원장은 “신식품 개발 및 보급을 통해 내수면 어업이 전북의

미래산업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연구센터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명칭이 변경된 민물고기연구센터(구 민물고기시험장)는

고소득 어족 지원인 새우류(큰장거미새우, 흰다리새우)양식법을 개발해 내수면 어업인에게 제공하는 등 전북도 어업활성화를 이끌고 있다. /유호상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